
IV.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본 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과정 및 이해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계의 미시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는 저출산·고령화를 가져오는 동인(출산을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이자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경제·사회 현상에 대해 가계가 미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가계위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소비

가. 가계의 소비행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기대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경로를 선택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는 생애 전체의 부(Lifetime Wealth)를 생존기간에 걸쳐 평탄하게 소비하므로 합리적 가계는 구성원이 은퇴를 하더라도 소비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불확실성, 예비적 동기의 저축, 여가 선택, 유증 동기 등을 가지고 기본 생애주기가설을 확장한 모형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모형들의 예측은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생애주기에 걸쳐 그들의 생활수준을 평탄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기본 모형과 유사하다²⁴⁾.

24)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서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불

그러나 실제로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정형화된 현상들은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는 다른데, 첫째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부를 계속 축적해 가거나, 은퇴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부가 감소하지만 그 감소 속도는 생애주기가설에서 예측하는 속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둘째,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은퇴 시점에 급격한 소비수준 하락이 관찰되며, 기대된 은퇴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은퇴·소비 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이라고 알려져 있다(Hamermesh, 1984; Banks et al., 1998; Bernheim et al., 2001).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에도 은퇴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비은퇴가구의 소비지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1>은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여주는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소비지출은 140만 원 수준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

<표 IV-1>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2009년 기준)

(단위: 명, 세, 원)

구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평균
가구원 수	3.5	3.7	3.2	2.6	3.3
가구주 연령	34.4	44.5	53.7	68.0	47.8
가계지출	2,794,335	3,233,383	2,920,976	1,779,523	2,782,841
소비지출	2,180,049	2,527,540	2,192,953	1,397,227	2,156,133
비소비지출	614,286	705,843	728,023	382,296	626,708

주: 소비지출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여,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 단체로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이룸.

자료: 통계청, 가구주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확실성을 들 수 있다.

25) 이러한 현상은 저축 퍼즐(Saving Puzzle)이라고 불리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V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나. 은퇴 전후의 소비행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시사점

가계가 은퇴 이후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크게 부(자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설명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의 축적, 행동경제학적 설명 등이 있다.

미국 RHS(Retirement History Survey)를 사용한 Hamermesh(1984)는 소비와 생애 부(자산)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연구는 은퇴 초기에 있는 가구들의 평균 소비가 소득을 약 14% 정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구는 은퇴 후 짧은 기간 내에 소비를 급감시켜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초기에 누렸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은퇴자들의 부(자산)가 부족하며,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질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Bank et al.(1998)은 영국의 가구지출 조사자료(FES: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여 코호트들의 은퇴 전후 소득과 지출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가계가 은퇴를 대비하여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는 가구주의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소비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 내 인구구조 변화와 사망위험을 고려한 소비평탄모형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직무 관련 비용, 사망위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소비 변화와 그 밖의 가계가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모형을 통해 예측된 소비하락률은 약 2%였던 것에 반해, 은퇴기에 실제 소비하락률은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에 의한 소비감소라고 결론지었다.

Bernheim et al.(2001)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1978년에서 1990년 사이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430개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패턴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은퇴시기에 평균 14%의 소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²⁶⁾. 이들은 은퇴 시기의 급속한 소비감소 행태를 가구들

26) 한편 생애주기가설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가계들이 서로 다른 저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간선호, 위험기피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 노년기

이 은퇴 직후에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점검하고 노후대비가 예상한 것보다 적음을 발견한 후 취한 행태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저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뉴스이고, 가계는 이러한 부정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은퇴가구의 소비행태를 건강위험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의료비 지출은 은퇴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계는 추가적인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Palumbo(1999)는 불확실한 의료비용의 효과를 고려하는 고령가구의 소비결정에 대한 동태적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Palumbo(1999)는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 나타난 은퇴가구들의 실제 소비수준과 건강 불확실성 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소비 수준이 가장 비슷해지는 값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상대위험기피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을 도입한 모형의 설명력이 생애주기모형보다 실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완벽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아울러 Aguiar and Hurst(2005)는 미국 가구들의 식료품 소비에 대한 자료인 CSFII(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 of Individuals)를 사용하여 은퇴가구의 식료품 소비를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은퇴 후 식료품에 대한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데, Aguiar and Hurst(2005)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 시간과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크게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퇴 여부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았고, 실업가구는 실직이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미친 영향에 상응하여 식료품 지출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저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시간과 대체함으로써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가에 대한 상대적 선호, 소득대체율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PSID와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위와 같은 요소들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진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심리적인 요소에 의한 설명이 분석결과와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실증연구들은 많은 경우 생애주기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은퇴가 가계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안종범·전승훈, 2005; 석상훈·장선구, 2009),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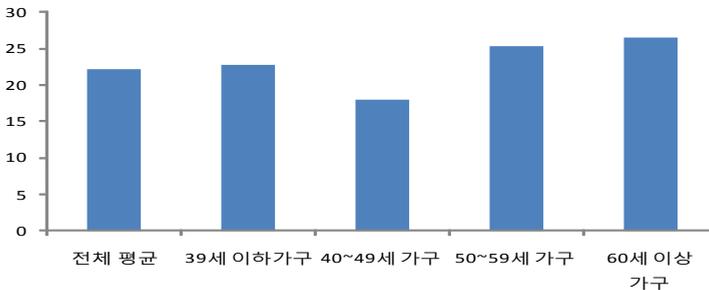
2.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

가. 가계의 저축행태 및 자산구성

1) 가계의 저축행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 저축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 가구주 가계가 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음(-)의 저축이 기대되는 60대 등 고령자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은 26.5%로 오히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통상적인 이론 예측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IV-1〉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주: 1) 2009년 기준임.

2) 저축률=흑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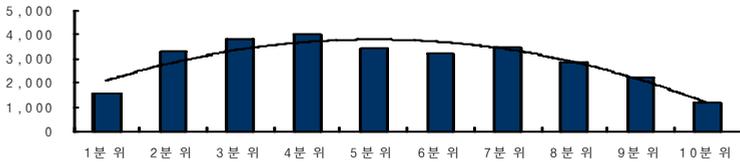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a).

27) 윤재호·김현정(2010)은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약 9%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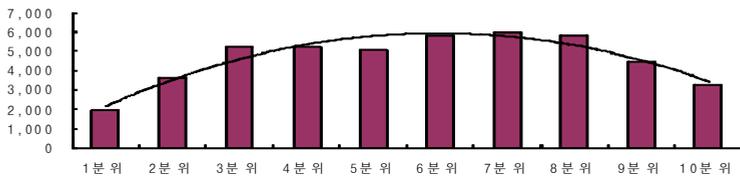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가계자산과 부채 축적은 역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축적 패턴을 비교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축적의 최고점 시기가 상이하다.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계의 연령대별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채도 높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은 은퇴 직전 내지 은퇴시점(49~54세)에 가장 높다.

<그림 IV-2> 연령대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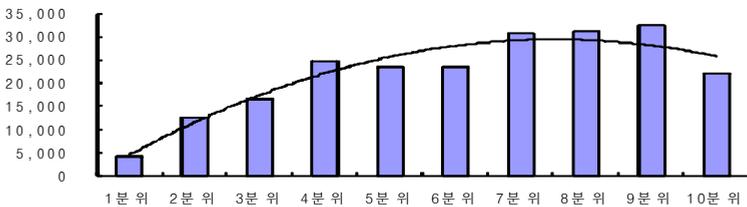
1) 생애주기별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 패턴



2) 생애주기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패턴



3) 생애주기별 가계의 부동산자산 보유 패턴



주: 1) 각 분위별 중위연령은 1분위(28세), 2분위(35세), 3분위(40세), 4분위(43세), 5분위 (46세), 6분위(49세), 7분위(54세), 8분위(59세), 9분위(65세), 10분위(74세)임.

2) 원 자료는 통계청(2007).

자료: 유경원·이혜은(2010).

2) 가계의 자산구성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실물자산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표 IV-2〉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년	2010년 2/4	2009년	2008년
실물자산	78.6	35.1	54.8	41.3
금융자산	21.4	64.9	45.2	58.7

자료: 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금융투자협회(2011), 주요국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함.

2)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실제로 이러한 실물자산 집중 현상은 중·고령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²⁸⁾가계는 주택 등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3〉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자산 종류	2006년	2008년
금융자산	20	18
비금융자산	80	82

주: 1) 1, 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비금융자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전체 시가 및 업체 및 농장의현재자산 가치, 운송수단, 기타 비금융자산가치를 포함함.

28) 중·고령자 가계는 만 4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특히 노인 인구는 건강 악화에 따른 경제적 위협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기 자산배분에 있어서 실물자산 집중 현상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V-4〉는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여준다. 이 중 노후대비와 관련이 높은 보험 및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24%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30%, 일본은 27%, 영국은 54%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각국의 금융시장 성격, 제도적 특징 그리고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는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 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 배)

자산 종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현금·예금	46.6	14.7	28.0	55.8
보험·연금	24.2	29.5	54.4	27.2
금융투자상품	28.4	52.0	13.9	12.9
기타	0.7	3.7	3.6	4.0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6.0	4.6	3.6	2.6

주: 1) 원 자료는 한국 통계청, 미 FRB, 영국 통계청, 일본은행.

2) 영국(2010. 1/4)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0. 2/4분기 기준임.

3)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OECD 추계).

자료: 1) 금융투자협회(2011).

한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 직전 세대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9,633만 원으로 경제적 은퇴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⁹⁾.

29) 조선일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복지재단이 전국 베이비 붐 세대 4,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5〉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구성

(단위: 만 원)

구분	자산 금액
금융자산	4,499
부동산자산	27,500
기타	1,041
총자산	33,040
부채	3,407
순자산	29,633

주: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자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2010).

이상에서 살펴 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가계저축과 자산구성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이후에도 저축률은 높다. 둘째,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채 규모도 높으며, 자산은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시점에 가장 많다. 셋째, 자산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았으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보험, 연금 비중이 낮아 은퇴 이후 안정된 소득흐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⁰⁾.

나. 은퇴 전후의 저축행태 및 자산구성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시사점

개인 또는 가구주의 연령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역시 Modigliani and Brumberg(1954)의 생애주기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연령과 저축간의 관계를 인구 전체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전체의 총 저축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본장 V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관련 소비이론³¹⁾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축의 총량뿐만 아니라 구성 측면에서도 위험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산간 상대적 수익률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생애주기모형에 추가적으로 미래소득 및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유동성 제약, 유증 동기 등을 반영하는 경우 저축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Carroll, 1997, 2001; Kotlikoff and Summers, 1981; Munnell and Sunden, 2003; Hurd, 1989; Bernheim, 1991 등). 이들의 연구 결과는 유증 동기로 인해 은퇴 이후 부와 소비의 시간 패턴이 보다 평활하게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예상보다는 음(-)의 저축이 완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예측은 기본적인 생애주기모형에 현실에 부합되는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수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들은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모형 및 가정, 분석기간, 선정된 변수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수요 및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결과(Mankiw and Weil, 1989; Bergantino, 1998; Brooks, 1998; Davis and Li, 2003 등)가 있는 반면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Poterba, 2001, 2004; Yoo, 1994)이 혼재해 있다³²⁾.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Browning and Lusardi(1996)에 기술되어 있다.

32) 특히 Poterba(2001, 2004)는 미국에서 1945-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인 2020-2050년 기간이 도래하여도 자산수요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산시장붕괴(asset market meltdown)'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산시장붕괴 가설은 미국에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 소비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금융자산(특히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2020년 또는 2030년을 전후하여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자산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가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들은 Sterling and Waite(1998), Dent(1998) 등으로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시장전문가들(market analysts)이었다.

이 중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금융자산 선택 및 이의 장기경로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는 Poterba(2001)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효과를 감안한 연령별 주식보유, 순금융자산, 순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령층의 위험자산 보유가 급격히 줄지 않는 이유로 의료비 지출 등을 위한 예비적 동기와 유산동기를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가계의 자산선택 분석에 주택 등 부동산을 포함한 연구들도 존재한다(Grossman and Laroque, 1990; Flavin and Yamashita, 2002; Cocco, 2005). 이 중 Cocco(2005)는 통상적인 모형과는 달리 주택 소유를 감안할 경우 주식투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국내 가계의 자산구성에 대한 연구는 미시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임경묵(2002)은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박창균(2003)은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박창균(2003)은 앞서 현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층의 자산보유 수준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연령효과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개인의 자산보유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고령화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3.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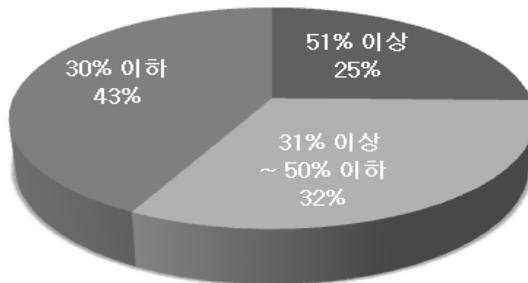
가. 은퇴준비기간 및 은퇴기간

1) 은퇴준비기간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³³⁾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대부분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53.6%)과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41.3%)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노후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의 평균은 현재 소득의 58.9% 수준이었다.

〈그림 IV-3〉 향후 마련 가능한 노후소득

(N=1,200 / 단위: %)



자료: 보험연구원(2010).

33) 본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퇴직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약 40%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미흡하였다. 안중범·전승훈(2006)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전체 가구의 65%가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과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³⁴⁾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이 금융자산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2.7%,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4.5%, 부동산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2%였다. 한편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6.3%인데 반하여,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이 자녀로부터의 보조라고 응답한 비중은 8.4%에 그쳤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자신들은 부모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상태 질문에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5.2%,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는 응답이 29.7%,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응답이 15%로 조사되었다.

2) 고령자의 노후생활 현황 실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09년을 기준으로 344만 원인데 반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9만 원으로 전체소득에서 32.3%, 사업소득은 46만 원으로 24.9%, 이전소득은 61만 원으로 56.9%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주 소득원은 친지로부터의 용돈 등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이다.

34) 조선일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복지재단이 전국 베이비 붐 세대 4,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6〉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단위: 명, 세, 천 원)

구분	노인가구	전국가구
가구원 수	2.5	3.3
가구주 평균연령	71.2	47.8
소득	1,826.4	3,442.8
경상소득	1,687.1	3,302.9
근로소득	590.6	2,244.0
사업소득	455.0	750.6
재산소득	36.5	-
이전소득	605.1	293.1
가계지출	1,552.7	2,782.8
소비지출	1,228.2	2,156.1

주: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09a).

〈표 IV-7〉은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로 하여 51.9%가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37.6%는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전체로 하여 생활비 마련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9.7%는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27.3%는 연금 및 퇴직금으로, 15.9%는 재산소득으로, 7.1%는 예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및 친척 지원에 의한 생활비 마련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표 IV-7〉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연령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득원천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소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65세 이상	100.0	51.9	100.0	49.7	15.9	27.3	7.1	37.6	10.4	0.0
65~69세	100.0	67.9	100.0	58.0	14.0	22.0	6.0	25.5	6.6	0.0
70~79세	100.0	48.0	100.0	44.2	17.6	30.1	8.1	40.4	11.5	0.1
80세 이상	100.0	23.8	100.0	27.8	18.0	46.2	7.9	59.5	16.7	-
(독거노인)	100.0	33.6	100.0	42.9	15.7	32.2	9.2	43.5	22.9	0.0

자료: 통계청(2009b).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및 미국 등에 비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문제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전문직, 정규직이 아닌 단순 일용직 중심의 비정규직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30.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20.1%, 미국은 17.2%, 영국은 7.8%, OECD 평균은 12.3%의 노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이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 평균
남자	41.5	21.9	10.5	29.4	17.6
여자	22.2	13.6	5.6	13.1	8.4
전체	30.1	17.2	7.8	20.1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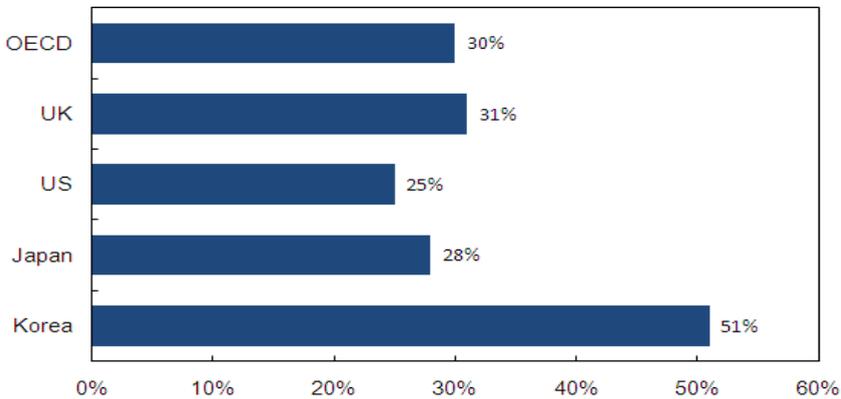
주: 1) 2009년 기준임.

2)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임.

자료: OECD(2010b).

한편, OECD(2008)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5년 현재 각국의 인구를 소득에 따라 총 5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별 구성원을 연령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우리의 관심 대상인 66세 이상 인구에 주목하여 노인인구 중 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의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인구는 51%를 차지하여 OECD 평균 30%와 일본의 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



자료: OECD(2008).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후소득의 적정성

은퇴대비 자산의 적정성 또는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가계의 자산 규모와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을 추정한 후 이들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Duncan, Mitchell and Morgan(1984), Burns and Widdows(1988) 등과 같은 연구들은 은퇴 후 소비에 필요한 순자산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여 대표가구 자산의 기대분포를 추정하거나 분포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별 자산축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Hubbard, Skinner and Zeldes, 1995; Engen, Gale and Uccello, 2000; Scholz and Seshardri, 2006).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한 국내 연구의 경우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은퇴 후 소득 수준이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9)과 같이 은퇴자산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 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예상되는 소비의 약 6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가구주의 연령이 20~59세인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 피델리타자산운용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자산은 8억 4천만 원인데 반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상되는 자산은 5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CSIS에서 발표하는 GAP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적정성지수 순위는 조사대상 20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국가재정지속가능지수(Fiscal Sustainability Index)와 소득적정성지수(Income Adequac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³⁵⁾.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적정성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세 가지 범주인 총소득 범주, 소득취약성 범주,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범주 중 중산층 노령인구에 대한 소득 적정성과 노인빈곤의 정도를 포함하는 소득취약성 범주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물론 GSIS의 GAP지수는 절대적 노후대비 정도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조사대

35) Jackson et al.(2010).

상 국가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나,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적정성 측면의 노후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가계행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퇴 이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축률도 생애주기가설을 토대로 한 예상과는 달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하면서 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소비를 줄이거나 건강위험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가계자산 구성 측면에서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박창균(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택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중이 타 국가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계 금융자산 중 노후대비 자산 성격을 지닌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 가계가 노후대비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직전의 베이비 붐 세대들 또한 자신들의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신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CSIS에서 개발한 고령화 대비 지수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계의 노후대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 가계에 대해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가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데에는 노후대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능력과 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